

중앙공원 1지구, 보금자리·휴식공간 어우러진 명품공원으로

광주시, 아파트 평당 1900만원·후분양 등 사업계획 변경안 수용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보상·추가 행정 절차 등 해결 과제도 산적

광주시가 정부의 갑작스런 고분양가 지정으로 난항을 겪어온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함에 따라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 공유 공간인 공원면적을 좀 더 확보하려는 광주시와 수익을 추구하는 아파트 사업자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일부 일정이 지연되면서, 토지 보상비 등 각종 비용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인 빙그레중앙공원개발(주)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했다. 시는 이번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적정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모두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익성, 사업성을 토대로 변경안의 타당성을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세대수와 용적률이 일부 늘어나긴 했지만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고 이후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주시 서구에 자리잡은 중앙공원을 오는 2023년까지 아파트와 시민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명품공원으로 조성한다. 전체 공원 면적 중 91.8% 공간에 8개 기능을 갖춘 다양한 테마숲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공원조성은 건설사들이 공원일몰제 시효 종료 대상인 공원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으로부터 사들인 뒤,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공간에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 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994㎡로, 세대수는 당초 2370세대에서 2827세대로, 용적률은 199.80%에서 214.33%로 늘리는 계획을 수용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원내 국방부 소유 정보사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토지와 누락 토지 추가 확보분 등 4만6570㎡가 포함됐다.

세대수는 분양의 경우 383세대로 계획했던 전용면적 85㎡ 이하(34평)를 빼고, 85㎡ 초과(37~80평)로만 1828세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임대는 85㎡ 이하가 50세대 늘어난 296세대, 애초 없던 85㎡ 초과(45평) 703세대로 계획됐다.

관심을 끈 분양가는 평당 1900만원, 임대는 평당



공원일몰제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 지정 시효가 해제돼 난개발 위기에 처했던 광주 중앙공원이 오는 2023년까지 명품공원을 품은 시민 휴식처로 거듭난다. 사진은 중앙공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1533만원으로 책정됐다. 광주시와 사업자는 애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상 과정에서 85㎡ 이하 1500만원, 85㎡ 초과 2046만원, 임대 85㎡ 이하 1350만원으로 분양가를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에서 갑자기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지정함에 따라 선분양 대신 후분양 방식을 선택했다. 후분양 방식은 분양가 설정이 일부 자유로운 대신 금융조달 비용이 많이 들고, 미분양 우려 등 각종 부담도 커 건설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다. 사업자들은 "정부의 고분양가 지역 지정으로 수

익구조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명품공원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험 부담이 큰 후분양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메이저 건설사들마저 후분양 방식을 꺼리고 있지만, 앞으로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비 최소화 등으로 전국 최고의 건설한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입장에서 일단 가장 큰 고비인 광주시의 사업계획 변경안이 수용되기 했지만, 앞으로 해결 과제도 수도무하다. 먼저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작으로, 공원위

원회 재협약, 경관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시의회 상정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다. 위원회 성격상 단 한 차례에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어 본격적인 사업 시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행정절차가 늦어질수록 지가 추가 상승 등으로 개발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미 지난해 계획 당시보다 20% 가까이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추가 보상비 등 늘어난 사업비만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계림동 아파트 단지 불법 거래 의심 104명 수사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불법 거래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광주 동구 계림동 아파트에서 불법 거래 행위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매제한 기간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 직접 거래 등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4명의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불법 전매 28건, 공금 질서 교란 33건, 다윤계약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이었다.

광주시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또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과 함께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가 착수한다. 불법 전매차, 공금 질서 교란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다윤계약, 소명자료 미제출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효정요양병원 코로나 추가 확진...BTJ열방센터발 집단감염 우려

증상발현 시점 달라 확진자 더 나올 듯...열방센터 방문자 검사 명령

광주 효정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또 '제2신천지 사태'로 불리며 전국적인 대규모 감염사태를 몰고 온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도 계속 추가되면서 지역 내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 19명(광주 1376~1394명)이 추가됐다. 이 중 13명은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환자 9명·직원 4명)다. 2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병원 입원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3일 간격으로 실시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나왔다. 전남 환자 193명, 직원 83명에 대한 PCR 검사를 했다. 지난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번째 검사다.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환자 92명, 직원 29명, 가족·지인 12명 등 133명까지 늘었다. 확진 환자와 직원들은 광주와 다른 지역 전담 병원으로 이송됐다. 비확진자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효정요양병원과 다른 요양병원에 분산 격리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증상 발현 시점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추가 검사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광주에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도 45명으로 늘었다. 시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광주에서 16명이 센터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7일 29명에 이어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 기존에 확인된 29명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를 했으며 이 중 4명이 확진됐다. 추가 방문자에 대해서도 18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센터 방문자들이 광주 교회 4곳을 방문해 교인과 가족, 지인 등이 연쇄 감염됐다. 광주에서 관련 누적 확진자는 66명에 이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센터 방문자를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방문자 명단이 부정확한 데다 일부 방문자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조기 검사와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 역시 이날 상주BTJ열방센터 등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된 종교시설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주 BTJ열방센터나 인터콥 울산지부를 방문한 도민은 오는 17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줄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

침이라고 전남도는 밝혔다.

전남도는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방문자 가운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1차로 명단을 넘겨받은 124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추가로 확보한 명단에 오른 도민 39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 1차 124명에 대한 검사에선 8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접촉자 검사에서 20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8명이 감염됐다.

전남은 지난 3일부터 11일째 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오후 6시 현재 전남 신규 확진자는 3명(전남 613-615번)으로, 나주와 광양, 순천에서 각각 한 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613번 확진자는 나주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시리아 국적의 전남 609번 확진자의 지인이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 614번 확진자는 광양 거주인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받았고, 615번 확진자(순천)는 기침, 인후통 증세를 느끼고 검사받아 확진됐다.

이날 전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562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562명 늘어 누적 7만212명이라고 밝혔다. 전남(537명)보다 25명 늘었으나 이를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h@

공공기관 채용 45% 이상 상반기에...공무원 3만명 총원

정부가 코로나19 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분기 고용 창출에 속도를 낸다.

황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인원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4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달 중 공공기관 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간 2만2000명 규모

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인턴을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경영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공무원도 약 3만명 총원한다. 총원 인원은 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이 1만3000명 규모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을 3만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64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 인원 104만2000명 중 80%에 달하는 83만명을 1분기 중 채용한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손실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전원복합운동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나. 명 칭 : 전원복합운동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남구청장
3. 보상대상
- 토지 및 지장물 : 광주 남구 계림동 140지번 일원
※ 보상대상 세목소재는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편면면적, 수량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열람기간 : 2021. 1. 14. ~ 2021. 1. 28.
5.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설과 보상팀 ☎ 062-607-4043
6. 보상의 시기 : 추후 개별통지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감정평가업자 3인(사·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사·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보상액결정 및 협의 요청하고, 소유자와 협의결정 후 손실보상금 지급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팔았을 시,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양식은 열람장소에 비치)
8. 기타사항
가. 공고와 동시에 소유자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계획 개별통지
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
다. 보상대상 세목소재(토지)의 내용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이의제기 서식은 열람장소에 비치)
라. 잔여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매수신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처 : 광주광역시남구청 건설과 보상팀 ☎ 062-607-4043

산행안내

1월 24일(일)
▲광주서산악회 1월 24일(일)
당신과함께하고싶은!북대유산
향적봉·눈꽃산행, 여주체육관
07:30, 동아병원앞 07:35, 롯데
백화점 07:40, 광주역 07:45, 문
예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 다음카페 광주서산악
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네날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69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 북 구**
 - 동 광 226-1920
 - 북광주 525-3761
 - 양 산 571-7658
 - 용 봉 433-1503
- 동 구**
 - 남 광 675-5530
 - 동 부 225-6001
 - 충 장 222-8171
- 남 구**
 - 남 부 675-5530
 - 봉 선 675-5530
 - 진 월 671-7276
- 서 구**
 - 광 천 382-5788
 - 서광주 369-1625
 - 치 평 376-6511
 - 화 정 369-1625
-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침 단 973-2900
 - 광 산 944-0444
- 문 흥 266-1960
- 신 안 222-8171
- 오 치 266-7601
- 우 산 433-1503
- 동 명 222-9054
- 중 앙 222-9054
- 백 운 651-1833
- 송 하 675-6605
- 상 무 372-2353
- 운 천 376-7153
- 풍 암 603-0311
- 월 곡 959-1920
- 하 남 955-0451